

노동당 2017 대통령선거 정책

: 재벌 해체와 사회화

I. 서론

노동당은 2016년 총선 정책에서 대자본의 주식과 채권에 금융자본 보유세를 부과해 금융 사회화 기금을 적립한다는 예비적 수준의 사회화 정책을 제안하였다. 1년 사이 경제 위기는 심화되었고 파국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제도 정치권이 제시하는 정책 처방으로는 위기의 극복은커녕 관리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경제체제의 정의로운 전환은 불가능하다. 이에 2017년 대선을 계기로 재벌 핵심기업에 대한 국민적 통제와 낮은 수준의 사회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한다.

520조원을 넘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를 민주화하고, 국민 연금이 주요 대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사회적 통제 역할을 하는 것은 국민적 통제를 강화하는 소유지배관계에 개입한다는 점에서는 초보적인 사회화 수단의 하나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이 사회화 기업의 지배 지분을 직접 인수하는 정책은 국민연금 부실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하여 정책안에 담지 않았다.

국유화, 공기업화, 협동조합화 등 다양한 방식의 직접적인 사회화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이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생산수단 사회화를 위한 일종의 양적완화 방식이다. 현재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이루는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상위 10대 재벌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70조원으로, 삼성전자 1개 기업의 시가총액 약 300조원의 1/4이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불과 5%도 안 되는 지분으로 방대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재벌의 지분을 국가나 사회가 그대로 인수해 전체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재벌 주요 그룹 사회화를 위한 1단계는 재벌 기업집단을 낱개 단위의 기업으로 쪼개는 것이다. 즉 재벌 해체이다. 재벌 해체는 사회화 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독과점 시장을 공정 시장으로 전환하고, 경제와 민주주의에 해악적인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완전히 해소하는 효과도 낳는다.

재벌 해체 이후 반도체, 조선, 해운, 석유화학, 통신, 제2금융 분야의 주요 기업의 지배 지분을 재벌 사회화 특별조치법을 통해 국가가 인수한다. 반면에 민영화의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KT와 포스코 등 과거 공기업은 재공기업화하는 정책은 개헌 없이도 추진 가능하다. 재벌 사회화 특별조치법은 사적 소유권과 시장경제를 체제의 기본으로 한 헌법 정신에 비춰 위헌 시비가 불가피하고, 이는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생산수단 사회화 조항이 들어가는 개헌이 필요하다.

주요 재벌기업의 사회화는 개헌을 필요로 하고, 특별한 사회적 격변과 정치적 합의를 거쳐야 현실성을 획득할 것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운동의 출발점은 정세 변화에 달려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시점에서 사회화 방법과 절차는 훨씬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대강의 경로와 방법만을 서술한다.

II. 재벌 중심 경제의 문제점

1. 수출주도 성장-가계부채 확장 정책의 지속 불가능성

1) 경제적 지속 가능성의 한계

- 국내외적 장기 저성장에서 수출주도성장-부채의존소비 경제구조의 지속 불가능성
 - 경제성장률 전망
 - *세계 2016년 3.1%, 2017년 3.4%(IMF)
 - *한국 2016년 3% 이하, 2017년 2.5%(한국은행)
- 장기 저성장은 신자유주의 모순
 - 노동시장 유연화, 금융자본주의 → 임금 및 가계소득 하락, 소득불평등 심화 → 유효수요의 부족

2) 국내 경제 상황

- 수출 절벽
 -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증가, 58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수출 감소
 - 세계 교역량 감소, 유가 하락,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 국내 대기업의 해외생산 확대 등 요인
 -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 FTA 제동,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움직임 → 수출 타격



- 고용 절벽
 - 2016년 실업자 101만명, 실업률 3.7% (1998년 149만명, 1999년 137만명)
 - 체감 실업자는 310만명, 실업률은 10%
- 소비 절벽
 - 가계부채 1300조원 시대, 자영업 부채 500조원
 - 소비자심리지수(CCSI) 2016년 12월 94.2, 2017년 1월 93.4(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09년 4월과 동일, 7년 8개월 만 최저치)
- 인구 절벽
 - 노동가능인구의 축소는 신자유주의 사회재생산 영역의 영리화와 관련된다. 사회재생산 영역의 영리화와 저임금화는 젠더 내부의 계층화를 낳고 재생산 노동을 구매할 수 없는 여성들의 숫자를 증가시킨다. 출산 위기 및 보육 위기로 이어진다.

-생산가능인구 변화

인구종류별	2025	2020	2017	2016	2015
생산가능인구(천명): 계 (15~64세)	35,757	37,266	37,620	37,627	37,444
고령인구(천명): 65세+	10,508	8,134	7,076	6,763	6,541

3) 재벌 수혜 Vs. 노동자·가계·중소상공인 피해 구도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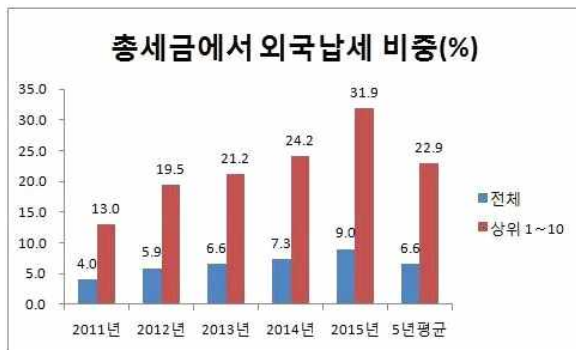
■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경제 체질의 변화

-해외투자 비중의 증가로 인한 국민경제 기여도 하락

*삼성전자의 경우 원자재 55.1%를 해외 계열사에서, 23.8%를 국내 계열사에서 조달 :
국내 중소기업 조달은 20% 이하

-해외 세금 납부 비중의 증가

<매출 10대 상위기업의 외국납세 비중>



자료 : 국세청, <한겨레>분석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성장과 수출의 임금 및 고용 기여도 하락

*2014년 10대 재벌 비정규직 노동자는 36.3%, 이중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30.2%, 직접 고용 비정규직은 6.1%

*재벌대기업의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일반 기업들의 2배

*2000~2014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4%인데 실질임금은 1.4% 증가

*수출 10억원 증가마다 1990년 65.4명이 취업, 2014년 7.7명 취업

■ 문어발 확장과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자영업 수탈

-납품단가 후려치기 : 2014년~2015년 2년간 제조원가 6.2% 상승 Vs. 중소기업의 완제품 납품 단가 1.4% 하락

-중소기업의 기술 및 시장 탈취

-한국 자영업 비중 25% 내외로 OECD 2배

*백화점, 대형마트, SSM, 영화관, 대리점, 편의점 등 소비 유통망의 재벌 대기업 장악

*빵집, 커피점, 외식점, 문구점, 고철시장까지 재벌 장악

■ 성장과 가계소득의 연관 해체

-1990~2015년 비교

*GDP 성장률 249% Vs. 가계소득 증가율 90.5%

*일자리 증가율 43.3%

-격차가 벌어진 시점은 신자유주의 도입 시기와 일치

*1990~1997년 GDP 성장률 70.7% Vs. 가계소득 증가율 63.2%

*1997년~2015년 GDP 성장률 104.4% Vs. 가계소득 증가율 68.4%

■ 소득불평등의 심화

-1997~2015년 1인당 GDP 성장률 85.6% Vs. 가계소득 증가율 19.7%

-GNI 중 가계와 기업의 몫의 변화

구분	가계	기업
1990	71.6%	17.0%
2015	62.0%	24.6%



-가계총소득 중 상위 10%의 몫 1990년 37.1% Vs. 2015년 48.5%

-국제비교

*한국의 2000~2015년 GDP 성장률 94.3%은 OECD 32개국 중 최고

*같은 기간 가계 순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54.6%로, 경제성장률과 가계소득 사이의 격차가 39.7%로 OECD 최고

*가계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80% 이상인 OECD 나라 17개국

4) 이념적 정당성 상실

■ 자본의 축적체제로서 재벌체제

-기형적 소유지배구조로 인한 경영의 위기

-고도성장기에서 경제주체들의 물질적 필요를 만족시켜준 과거의 경험에서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효율적 자원배분의 기능 상실

■ 박근혜 게이트 : 뇌물 거래를 통해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물질적 이해에 위해를 가하는 지대 추구자(rent-seeker)로서의 재벌의 모습이 극명히 드러남

2.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와 문제점

1)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5% 안팎 소수 지분으로 방대한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이며, 이는 현행 순환출자제도, 지주회사제도, 금산분리제도를 통해 뒷받침된다. 이러한 소유지배구조에서는 세습 경영, 배임과 횡령의 만연,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나타난다.

■ 기업집단 내부지분율의 증가

*소유 : 주식 지분

*지배 : 회사에 대해 갖는 주식의 의결권

<총수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변화>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총수	1.3	1.1	1.1	1.0	1.1	0.9	1.0	0.9	0.9	0.9
(총수일가)	(3.4)	(3.2)	(3.3)	(3.1)	(2.9)	(2.7)	(3.0)	(2.8)	(2.7)	(2.6)
계열회사*	44.1	44.7	45.6	44.0	50.3	52.8	49.6	49.5	50.6	54.9
내부지분율	47.9	48.3	49.3	47.4	53.5	55.7	52.9	52.5	53.6	57.6

출처 : 공정거래원회

■ 소유와 지배의 괴리

-내부지분율(자사주 포함) = 총수일가 지분율 + 계열회사 지분율

-총수일가 지분율은 5% 내외 Vs. 의결지분율은 50~60%

-프랑스나 독일의 가족기업은 소유 40%, 의결 55% 수준

<10대 (총수 있는)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구분	동일인 (a)	동일인 관련자									동일인 합계 (k=a+f +g+h+i +j)	기타 합계 (l)	총계 (m=k+l)
		혈족			인척 4촌 이내 (e)	친족 합계 (f=b+c +d+e)	비영 리법 인(g)	임원 (h)	자기 주식 (i)	계열 회사 (j)			
		배우 자/1 촌(b)	2촌-4 촌(c)	5촌-8 촌(d)									
삼성	0.61	0.48	0.00	0.00	0.00	0.48	0.16	0.02	4.34	46.36	51.98	48.02	100.00
현대차	1.74	1.28	0.08	0.00	0.24	1.60	0.02	0.01	1.40	46.86	51.63	48.37	100.00
SK	0.03	0.00	0.36	0.00	0.00	0.37	0.04	0.01	1.44	58.75	60.44	38.73	99.37
엘지	1.29	1.41	1.13	0.00	0.01	2.55	0.27	0.04	0.15	35.80	40.07	59.90	99.96
롯데	1.19	2.07	0.03	0.00	0.00	2.10	0.11	0.01	8.00	72.02	83.43	16.39	99.82
지에스	1.55	0.15	9.10	1.12	0.02	10.39	0.07	0.01	0.23	48.61	60.58	39.15	100.00
한화	0.96	0.67	0.00	0.00	0.00	0.67	0.10	0.02	7.07	51.98	60.81	38.66	99.47

현대중	0.87	0.00	0.00	0.00	0.00	0.00	0.35	0.00	1.15	69.55	71.92	28.08	100.00
한진	1.23	0.47	0.00	0.00	0.07	0.54	0.92	0.04	10.39	43.71	56.83	43.16	100.00
두산	0.06	0.76	1.54	0.00	0.10	2.40	0.35	0.02	2.88	39.24	44.96	55.03	99.99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 자료 재구성(2016.4.1.)

2) 재벌 소유지배구조 관련 제도

① 순환출자제도

■ 상호출자의 금지(공정거래법 제 9조)

- 상호출자 :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A기업에 출자한 형태
- 지배주주의 실제 자본의 납입 없이 가공자본을 만들어 지배하게 되는 효과로 인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대상 : 자산총액 합계 10조원 이상(27개 기업집단)

■ 순환출자

- A 회사가 B회사에, B회사가 C 회사에, C 회사가 A회사에 지분 출자하는 형식
- 상호출자와 마찬가지로 가공자본을 형성해 지배구조 왜곡 가져오나 허용된 상태
- 2013.12.31. 신규 순환출자 금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됐으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는 인정
- 2016.4.1.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64개 중 순환출자 기업집단의 수는 8개, 순환출자 고리 수는 94개
- 8개 순환출자 기업집단 : 롯데(67개), 삼성(7개), 영풍(7개), 현대자동차(4개), 현대산업개발(4개), 현대백화점(3개), 대림(2개)

■ 순환출자 관련 이슈

- 2016.9.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대상의 자산 기준을 상향(자산합계 5조원 → 10조원)하여 38개 기업집단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순환출자 가능해지고, 각종 공시의무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벗어남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공정위 특혜 여부 특검 수사 중

② 지주회사제도

■ 개념

- 지주회사 : 주식의 소유를 통해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회사
- 공정거래법 개념 :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으로 자회사 주가가액 합계액이 당해회사(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

■ 현행 지주회사제도

-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200%로 제한
-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상장법인 20%, 비상장법인 40% 이상 소유
- 자회사 이외 국내 다른 회사 주식소유 금지
- 금융 자회사와 비금융 자회사 동시 소유 금지(금산분리)
-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해 상장법인일 경우 20%, 비상장일 경우 40% 이상 소유 의무
-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에 대해 100% 지분 소유 의무

■ 지주회사 제도의 형해화

- 재벌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경제력 집중 억제, 구조조정 촉진 등의 목적으로 1999년 도입
-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행위 규제 완화되어 현재는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확장되는 효과
- 행위 규제 완화 내용
 - *지주회사 부채보유 비율 : 100% → 200%로 허용
 - *손자회사 보유 : 금지 → 사업관련성 조건부로 허용 → 사업관련성 요건 폐지(전면 허용)
 - *100% 지분보유 조건부로 증손회사 허용

■ 해외 지주회사제도

구분	규제
미국	-일반적인 금지는 없으나 지주회사 설립이 시장 경쟁 제한이나 독점을 유발할 경우 원칙적 금지(Sherman 법, Clayton 법) -자회사 지분을 요건(75~80%), 대체로 100% 유지 -자회사의 손자회사 소유 원칙 금지, 지주회사-중간지주회사-자회사 형태로 예외적 허용
독일	-경쟁제한금지법에서 지주회사 설립 규제(콘체른 규제) -지주회사 산하에 많은 수의 자회사 설립 -자회사 주식보유는 대부분 100%
영국	-지주회사 설립으로 시장점유율 25% 이상 또는 양도자산이 7,000만 파운드 초과할 경우 독점·합병행위 심사 -경영권 인수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30% 이상 취득시 100% 조건으로 매수 의무화)

■ 지주회사 관련 이슈

- 지주회사 전환시 자사주를 이용한 지배력 확장 : ‘인적 분할을 통한 자사주의 마법’
 - *기업 분할의 방법으로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
 - 물적 분할 : 기업 분할 시 신설회사의 주식을 기존회사(존속회사)가 전부 소유
 - 인적 분할 : 기업 분할 시 신설회사의 지분을 기존회사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대로 소유
 - 자사주 : 법인이 자체 보유한 주식으로 의결권 불인정
- 인적 분할을 통한 대주주 지배력 확장 시뮬레이션
 - *기존회사에 대해 대주주 42%, 기타 주주 28%, 자사주 30% 지분 보유 → 의결권 비율은 <대주주 60% : 40% 기타 주주>
 - *물적 분할시 : 의결권 비율은 <대주주 60% : 40% 기타 주주> 유지
 - *인적 분할시 : 기존회사(존속회사)가 자사주 30%를 그대로 승계하는 동시에 자사주 비율만큼 신설회사의 분할신주를 배정받음 → 기존회사가 승계하는 30%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통해 배정받은 분할 신주에는 의결권 발생 → 신설회사의 지분 구성은 대주주 42% : 대주주의 지배를 받는 자사주 분할 신주 30% : 기타 주주 28%로 변경 → 신설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의결권 비율은 <대주주 72% : 기타 주주 28%>로 변경
- 현대중공업, 오리온, 매일유업, 크라운제과 등이 자사주 제도 활용한 인적 분할 추진 중
- 삼성전자의 인적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추진 관련
 - *삼성전자는 현재 12.8%(시가 기준 약 30조원)의 자사주 보유
 - *박용진 의원 2016.7. 인적 분할 방식 지주회사 전환시 자사주에 분할신주 배정 금지한 상법 개정안 발의

③ 금산분리제도

■ 개념

- 금융과 산업의 분리 제도
- 금융의 특성(공공재로서의 성격,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신용창조 기능, 고객이 맡긴 돈으로 운영되는 특성 등) 때문에 동일인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산업자본)을 동시에 지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여러 규제 장치 존재

■ 현행 금산분리제도

구분	금산분리 규제 내용	사건
은행법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은 은행 주식의 4% 초과 보유 금지(지방은행은 15%) -의결권 행사하지 않을 조건으로 10%까지만 보유 허용	론스타 사건
공정거래법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국내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보유 지분과 관계없이) 15% 이내로 제한 -지주회사제도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계열사 보유 금지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시 중간금융지주회사 허용 문제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 국내회사의 지분 소유 금지	삼성생명의 금융지

		주회사 해당 문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은 계열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 소유시 금융위 승인 -지분 투자로 사실상 지배관계가 수립하는 경우로 5%, 10%, 25%, 33% 이상 소유시 각 단계별로 금융위 승인	삼성생명의 금산법 24조 위반 상태
보험업법	-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액은 보험사 총자산의 3% 미만으로만 가능(보험사 자산운용 규제)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

■ 삼성그룹의 금산분리 규제 위반 역사(노무현 정부 당시 특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것을 규정

*2004년 당시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하여 삼성생명을 지배함과 동시에, 삼성생명의 주식가치 상승으로 삼성생명에 대한 소유 주식의 가액이 에버랜드 자산총액의 54.7%를 차지하여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충족

*그러나 삼성에버랜드는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받지 않음

*금감위가 2006년 입법예고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부칙으로 개정법률 시행 당시 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회사에 대해 개정 전 법률의 인가취소에 따른 주식처분, 벌칙,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면죄부 부여 → 2007년 통과

-금산법 제24조 위반

*사실상 지배관계가 수립하는 경우로 금융위의 승인 없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5% 이상 초과 보유(2006년 7.26%)

*2007.12. 삼성의 금산법 위반에 대한 문제 제기에 따라 금산법 개정했으나 개정의 내용은 강제매각 대신 초과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만 제한 → 법 위반 상태를 사후 정당화

-보험업법 취지 위반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액이 보험사 총자산의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계열사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액 / 보험사 총자산 \geq 3%)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 11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 관련, 보험사의 다른 모든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규제 관련 규정과 다르게 계열사 유가증권(분자)에 대한 평가는 취득원가로, 보험사의 총자산(분모)은 시가평가 방식을 적용 → 보험업법 취지 위반

*2015년 4월 기준으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에 대해 14조원 가량의 주식을 추가로 보유 가능 → 19대 국회 보험업법 개정안 무산으로 현재까지도 이 상태 유지

■ 금산분리 이슈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관련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허용 문제(중간금융지주회사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 지주회사 제도에 위반 → 공정위 중간금융지주회사 허용 입법안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여부

3)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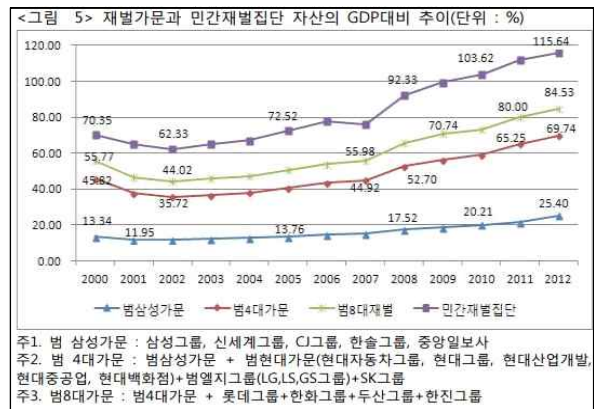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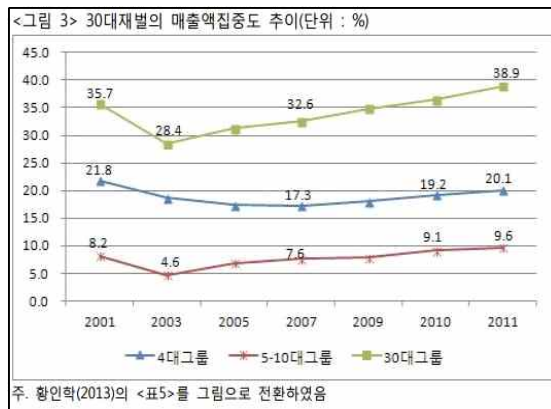
■ 나쁜 대리인으로서의 재벌

- 강력한 사익 추구 유인 : 소유 지분이 작고 지배력은 클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기업의 이익과 충돌하는 총수일가 사익 추구 유인이 강하게 작동
- 배임·횡령의 만연
 - * 총채적 불법 위에 구축된 삼성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과정
 - * SK 최태원의 배임·횡령
-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회사기회 편취의 만연

■ 세습 경영

- 경영 능력 검증 안 된 2세, 3세로의 경영권 승계

4) 경제력 집중과 그 폐해



■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의 자산 집중(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리포트 2014-02호)

- 재벌그룹의 자산이 전체 기업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 2000년 46% → 2012년 57.37%
- 30대 총수 있는 재벌그룹의 자산이 전체 기업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 2000년 31.73% → 2012년 37.41%
- 재벌 가문별 자산 집중도
 - * 삼성 2000년 6.67% → 2012년 9.33%
 - * 4대 재벌 22.9% → 25.63%

■ 재벌그룹의 매출액 집중도

■ 재벌그룹의 GDP 대비 매출액 비중

■ 재벌의 이익률과 고용

- 재벌 소속 100대 기업이 전체 기업의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 60%, 고용은 4%
- 중소기업의 이익 비중 = 35%, 고용은 71%

-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심화
 - 임금 수준 1980년대 대기업의 90%, 1990년대 75~80%, 2010년대 50~60%
 - ex) 현대차 1차 하청기업의 임금은 원청의 60%, 2차 36%, 3차 24%
- 자영업 시장의 축소와 자영업자들의 몰락
- 소비자 후생의 취약
 -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제 등 소비자 권리 제도의 좌절
 - 수출품과 내수품의 품질 격차 ex) 현대차, 농심 컵라면 등
- 민주주의 위협 : 박근혜 게이트
- IMF 외환위기와 비슷한 상황 전개 가능성
 -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재벌기업의 경영 위기 → 전체 경제시스템의 위기
 - 금산복합기업의 시스템 위험
 - *삼성전자의 파산 → 삼성생명의 부실화 → 금융시스템 위기

3. 재벌 개혁 관련 주요 입장들

- 시장주의적 개혁(재벌개혁론, 경제민주화론)
 - 기형적 소유지배구조 개혁과 경제력 집중의 억제 → 공정경쟁 회복에 중점
 - 순환출자, 지주회사제도, 금산분리제도 등을 시장주의 원리에 맞게 개혁
 - 총수일가 전형적 경영에 맞서 (소수) 주주권 옹호
 -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참여연대
 - 주요 인사 : 장하성, 김상조, 박상인 등
 - 이병천, 유승일 등 : 시장주의적 개혁 + 노동권과 복지의 강화를 수반하는 분배 개혁
- 재벌-사회 타협론
 - 금융주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비판적 관점
 - 한국 경제의 대립을 초국적 자본과 금융 세력 Vs. 재벌 + 한국 민중으로 구도화, 시장주의적 재벌 개혁에 의한 재벌 해체는 초국적 자본에게만 유리한 경제질서로 귀결된다는 입장
 - 국가(또는 사회)가 초국적 금융에 대항해 재벌의 경영권과 그룹 지배를 인정하되 노동권 보장, 조세와 복지 확충을 통해 복지국가로 가자는 재벌과 국가(사회)의 타협을 주장
 - 과거 대안연대, 현재 장하준, 정승일 등의 주장
- 재벌 사회화론
 - 국민들의 희생과 국가의 집중적인 지원, 노동 착취를 통해 이룩한 재벌의 경제적 성과

- 는 국민 모두의 것이 되어야
- 시장주의적 개혁과 재벌-국가 타협론 양자에 대해 비판적
- 과거 복지국가가 신자유주의로 인해 작동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적극적 고려
- 재벌 자본의 소유 내지 경영권에 대한 사회의 직접적 통제가 대안

4. 노동당 재벌정책의 기본 방향

2016.8. 기준 10대 재벌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 시가총액 778조5247억원, 대주주 일가 416명 보유 주식 가치는 70조1475억원이다. 이론적으로 현재의 재벌 소유지배구조를 그대로 두고 재벌의 그룹 지분을 국가 내지 공공이 인수한다면 재원은 70조원 수준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의 재벌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그대로 두고 국가나 사회가 재벌 그룹 전체를 경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도 않다.

노동당의 재벌정책은 재벌 자본의 사회화를 기본 방향으로 두되, 국가나 사회가 시장경제를 단기간에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주의적 개혁을 통한 재벌 해체를 재벌 사회화의 수단이자 경로로서 수용한다. 동시에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민주화를 통한 재벌 기업에 대한 경영권 통제, 재벌 자본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견제 장치를 병행한다. 노동당의 재벌 정책은 또한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 저부담 간접세 중심 조세제도 등 한국 신자유주의 체제를 대안의 사회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동당 사회경제정책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설정된다.

III. 정책 : 재벌 해체와 사회화

1. 재벌 해체

1) 시장주의적 개혁

- 순환출자의 금지와 해소(공정거래법 개정)
 - 공정거래법 제9조의 2(순환출자의 금지)를 개정
 - 신규 순환출자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의 강화뿐만 아니라 기존의 순환출자도 금지
 - 기존 순환출자는 5년 이내 해소
- 지주회사제도 개혁(공정거래법, 상법 개정)
 - 지주회사 전환시 반독점 심사 강화(공정거래법 개정)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허용 한도를 현행 200%에서 100%로 강화(공정거래법 개정)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100% 지분 요건 규정(공정거래법 개정)
 - 손자회사, 증손회사 불허(공정거래법 개정)
 - 인적 분할시 분할신주 배정 금지(상법 개정)

- 금산분리 규제 강화(공정거래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등 개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으로 금융업 또는 보험업 영위하는 회사는 현재 비금융 계열사에 대해 15%까지 의결권 허용했으나 이를 금지함(공정거래법 개정)
 - 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액을 보험사 총자산의 3% 미만으로 규정한 보험업 취지를 분명히 하는 보험업법 개정
 - 중간금융지주회사 불허(현행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유지)

2) 비리 경영인 처벌 강화와 경영권 박탈

- 비리 경영인 등 처벌 강화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범죄에 관한 집행유예 금지(특경가법 개정)
 - * 특경가법상 범죄에 대해서는 현재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 징역을 규정
 - * 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른 감형으로 3년 이하 징역 판결이 가능해 집행유예가 빈발
 - * 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른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특경가법상 모든 범죄에 대해 7년 이상 징역형을 규정
 - 특경가법상 범죄에 대해 사면 금지(사면법 개정)
- 비리 경영인의 경영권 박탈(상법 개정)
 -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인사에 대해 5년 동안 이사 자격 박탈
 - 부정행위나 정관을 위반하는 등 사유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사의 직에서 해임된 경우 해임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이사 자격 제한
 - 재벌 총수의 경우 법인의 등기이사가 아니면서도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법의 개정으로 재벌 총수 등의 경영권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님

2. 재벌 사회화

1)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재벌 경영권 통제

□ 현황

-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현황
 - 국민연금기금은 2016.4. 기준 525.3조원으로, 규모에서 세계 4대 연기금에 속함
 - 국민연금기금 투자 금액과 비중
 - * 2016.4. 기준 국내 주식시장에 약 96.4조원, 채권에 279.2조원 투자
 - * 2015년 말 기준 국내 주식시장에 6.5% 지분 보유
 - * 4대 재벌그룹 상장사 5% 이상 보유지분 규모(2016.7월 말 현재)
 - 삼성 24.2조원(7.85%) > 현대차 7.4조원(7.63%) > LG 6.9조원(9.51%) > SK 6.7조원(10.93%) = 합계 45.3조원(평균 7.18%)
 - 국내 주식시장 투자는 재무투자가 아닌 지분투자 성격
 - * 국민연금이 투자한 대기업의 60%가 지배주주의 지분보다 더 높은 지분 보유

*재무투자 성격이 아니라 장기적 성격의 지분투자에 가까움

*2012.6.30. 기준 국민연금기금 주식투자액의 64.8%가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에 투자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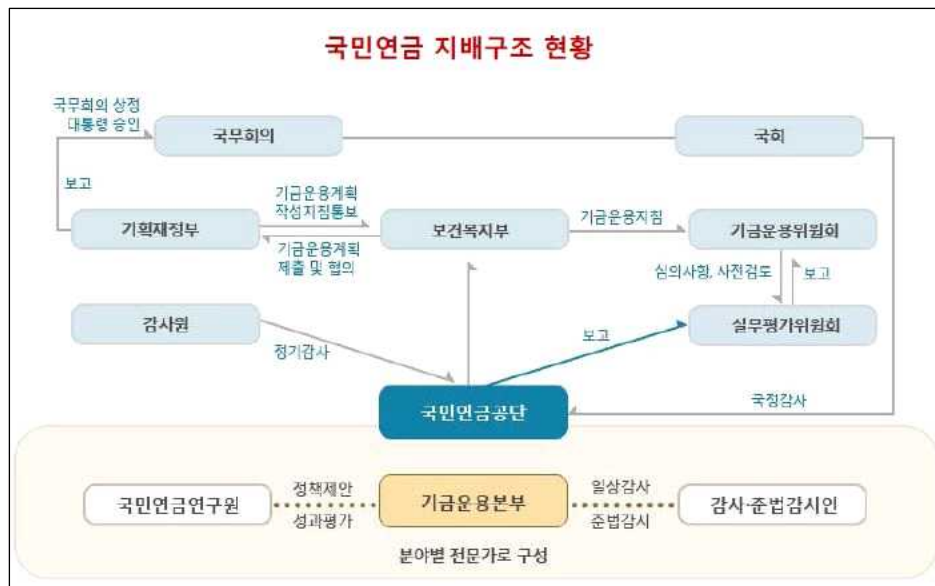
<표1-14> 부문별 투자금액과 비중(잠정치) (시가 기준, 단위 : 억원, %, %pt)

구분 ⁴⁾	2016년 4월말(A)		2015년 4월말		2015년말(B)		증감(A-B)	
	금액	비중 ¹⁾	금액	비중 ¹⁾	금액	비중 ¹⁾	금액	비중
금융부문	5,253,020	99.8	4,903,844	99.8	5,116,983	99.9	136,036	△0.1
국내주식	963,996	18.4	966,302	19.7	948,965	18.5	15,031	△0.2
해외주식	706,559	13.5	599,685	12.2	699,357	13.7	7,202	△0.2
국내채권 ²⁾	2,791,999	53.2	2,670,112	54.4	2,702,634	52.8	89,365	0.3
해외채권 ²⁾	224,752	4.3	204,648	4.2	219,442	4.3	5,310	0.0
국내대체	220,149	4.2	213,613	4.4	223,404	4.4	△3,255	△0.2
해외대체	345,564	6.6	247,484	5.0	323,181	6.3	22,382	0.3
복지부문	1,391	0.0	1,277	0.0	1,362	0.0	29	0.0
기타부문 ³⁾	10,727	0.2	8,958	0.2	4,896	0.1	5,831	0.1
기금자산 계	5,265,138	100.0	4,914,079	100.0	5,123,241	100.0	141,897	-

1) 금융부문의 자산군별 비중은 금융부문 내 비중
 2) 단기 자금 포함. 2016년 4월말 기준 단기자금규모는 원화 2조 71억 원, 외화 742억 원
 3) 기타 부문은 회관취득비, 일차보증금, 기금보관금 등이며 기금보관금은 자산단기에 따라 증감
 4) 금액과 비중은 반올림 처리에 의해 세부단위의 합계와 증감에서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2016),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자료집, 7월 1일, p.3

■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전체 지배구조



출처 : 자본시장연구원

-국민연금기금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7명, 감사 1명을 두고, 이사에는 사용자, 노동자, 지역가입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

- 공무원 1인을 당연직으로 둬
-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상임이사·이사·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위원 5인(기획재정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공단 이사장) + 민간위원 14인(사용자 대표 3인, 노동자 대표 3인, 지역가입자대표 6인, 민간전문가 2인) = 총 20인으로 구성된 비상설 기구
- 주식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결정(공단에서 찬반 의견 내기 곤란한 경우로 제한)
 - *의결권행사전문위는 위원장 포함 9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
 - *민간위원은 정부 2인, 사용자 2인, 노동자 2인, 지역가입자 1인, 시민단체 1인, 연구기관 1인 추천하고, 기금운영위원회가 임명
-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기금 산하의 투자전문조직

■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하되(국민연금법 제102조 제1항),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제2항) 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함(제105조 제1항)
-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운용(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 17조)
 - *의결권 행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르도록 함
 - *일상적인 의결권은 기금운용본부 산하 투자위원회에서 진행
 - *공단에서 찬성 또는 반대의 판단을 하기 곤란한 안건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함
- 국민연금의 투자 원칙 중 공익성 및 사회책임투자 관련 항목
 -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4조(기금운용 원칙) 3. 공공성의 원칙 : '국가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
 -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지침 제4조의2(사회책임투자) : '기금은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사회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규정
 - *2013년에 국민연금기금공단에 책임투자팀 설치

■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와 운용의 문제점

-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
 - *국민연금기금의 임원 구성을 정부가 결정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구성에서 정부측 인사 비중이 높고 비상설기구로서 기금 운용과 관련한 실질적 역할을 못함
- 의결권 행사에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
 - *의결권행사지침 제17조는 공단에서 찬성 또는 반대의 판단을 하기 곤란한 안건만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함
 - *의결권행사 실적 극히 미미

출처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단위 : 회, 건)

년도	의결권관련 안건수	의결권행사 횟수	의결권전문위원회 개최(보고안건수)	의결권전문위원회 심의 안건 수
2014	2,775	735	4회(4건)	2건
2015	2,836	749	6회(7건)	2건
2016	3,018	783	1회(3건)	0건

■ 국민연금기금 개혁의 방향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 강화

-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기금 운용
- *독립성 강화는 정부 입김으로부터 자율성을 뜻하며, 정부가 의도하는 기금의 독립기구화와 정반대 입장(민간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운영을 명분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기금 독립은 오히려 금융시장과 자본의 영향력 강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되로 전환하고, 권한을 강화하되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통제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개편

-공공성 제고와 사회적책임 투자원칙의 강화

- *기금운용지침과 의결권행사지침에 선언적 문구로 되어 있는 사회적책임투자 원칙을 국민연금법에 근거 규정을 만들고, 운용지침에서 구체적 사회적책임투자 원칙 마련
- *의결권 행사에 중점을 둔 운용 원칙을 사회적책임 투자와 관련한 투자, 투자의 회수, 경영 일반에 대한 주주권 행사로 범위 확대
- *노동권 침해, 구조조정, 인수합병 등에 대해 사회적책임투자의 원칙 아래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
- *공공투자의 강화

□ 정책

■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국민연금법 개정)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기구화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를 기금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인 심의·의결 기구화, 위원의 회의소집요구권 명시

-정부 영향력 축소와 가입자 대표성 확대

- *현행 5인의 정부위원 몫을 2인으로 축소(기재부차관과 공단 이사장), 지역가입자 대표를 현행 6인에서 4인으로 축소
- *늘어난 5인의 몫을 여성 대표 2인, 장애인 대표 1인, 청년 대표 2인으로 변경

-국회 통제권 강화

- *여성 대표(2), 장애인 대표(1), 청년 대표(2), 지역가입자 대표(4), 민간전문가(2)의 추천권을 그 분야의 민간단체가 보유하고, 임명권을 국회가 보유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매 2회 이상 의회에 위원회 심의의결 상황 및 기금운용 상황에 대한 보고의무 신설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전문위원회로 확대 강화

- *상설기구화하고 주주권 행사 내역에 대한 1회 이상 국회 보고 의무화
- *의결권을 포함하여 상법 규정상의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검사인 선임청구권, 주주제안

권, 감사해임 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대표소송권 등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이에 대한 행사지침 마련

■ **공공성과 사회책임 투자원칙 강화**(국민연금법, 기금운용지침, 의결권행사지침 등 개정)

-국민연금법에 기금의 투자 원칙으로서 노동권 존중, 환경 보호,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사회공공성 제고 등 공공성 투자 원칙의 근거 규정 마련

-기금운용지침 ‘국가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과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노동권과 인권, 환경, 국가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로 개정

-의결권행사지침 개정

*의결권행사지침의 명칭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지침’으로 변경

*의결권행사지침 제4조의 2(사회책임투자) 규정 ‘기금은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사회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규정을 ‘기금은 노동, 인권, 사회정의, 기업지배구조 등 사회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규정으로 변경

*노동, 인권, 사회정의, 기업지배구조 등에 대해 기업의 노동권과 인권 침해,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법률 위반,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등 각각의 요소에 대한 투자 원칙을 구체화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주주권행사위원회는 의결권 행사뿐만 아니라 투자 여부, 투자의 축소와 회수 기준을 주주권행사지침에서 구체화하여 적극적으로 행사

2) 재벌 핵심기업 등의 경영권 인수

□ 현황과 취지

■ **핵심 재벌기업 사회화의 필요성**

-상황적 필요성

*개발독재 시기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에 따른 역사적 산물로서 재벌 중심 경제가 신자유주의와 결합하여 경제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실업과 불안정노동의 만연, 임박한 4차산업혁명 등으로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과 현실성이 강화되는 국면에서 조세기반형 기본소득만으로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에 한계, 생산수단 공유형 기본소득으로 나아갈 필요성

-정치적 필요성

*보수야당에 의한 부분적인 시장주의적 개혁으로 시대과제인 신자유주의 극복 불가능

*노동당 생산수단 사회화 강령의 정책화를 통한 좌파정당으로서 정책적 차별성 강화

*민주주의를 형해화하는 재벌 자본의 힘을 근원적으로 제거

-역사적 정당성

*국가적 특혜와 국민적 희생 위에 성장한 재벌이 국민경제의 약탈자로 군림하는 상황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사회적 단죄, 재벌 중심 경제와의 단절을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

하고 대안 경제 모델로의 전환을 사회적으로 확인할 시점

■ 민영화된 구(舊)공기업의 재(再)사회화 필요성

- KT(구 한국통신), 포스코(구 포항제철) 등 민영화된 구 공기업에서 주주자본주의 경영이 관철되어 노동권 침해, 단기 실적 위주 경영과 주주이익 극대화 경향의 폐해가 극명히 드러남
- 민영화 이후에도 부패한 정치권력과 유착을 통해 비리가 만연
- KT의 경우 1위 통신사업자로서 1위 사업자에 대한 공기업화는 시장지배력을 통해 통신의 공공재적 성격을 전체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대안

■ 경영위기 기간산업 공기업화 필요성

- 조선과 해운 등 산업 분야에서 경영 위기가 나타나 대량 해고가 진행 중
- 조선과 해운은 고용, 수출, 지역경제 등의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구성에서 시장에만 역할을 맡겨 존폐를 결정해서는 안 되는 기간산업으로서 성격

□ 정책

■ 재벌 사회화의 설계와 구현 절차

- 시장주의적 개혁을 통한 재벌 해체
 - *재벌 총수일가가 현재의 지분으로 지배할 수 있는 기업의 대폭 축소
 - 예)삼성 이진희와 이재용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분 재산을 22조원으로 봤을 때, 2017.4.12. 삼성전자 시가총액 약 295조원의 7.4%에 불과. 이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투자 등과 합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정도를 지배할 수 있는 수준 또는 그 이하.
 -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해소 효과
- 핵심 대기업에 대한 국가의 경영권 인수
 - *대상 : 반도체, 자동차, 조선, 해운, 제2금융, 통신, 석유화학
 - *개혁을 통해 핵심 대기업의 사회화를 위한 헌법상 근거조항 마련
 - *재벌 사회화 특별조치법으로 핵심 대기업의 지분을 국가가 강제로 인수하기 위한 근거법 마련
 - *지분 인수를 위한 재원 마련은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양적완화)
- 기타 관련 법령의 정비
 -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독소조항 제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생산수단 사회화 근거 마련을 위한 개헌(헌법 개정)

- 핵심 대기업의 개인 지분을 국가가 강제로 인수하기 위해서는 재벌 사회화 특별조치법으로 근거 법률이 필요
- 재벌 사회화 특별조치법은 시장경제와 재산권 존중을 규정한 헌법 규정에 비취 위헌 문제를 야기하며,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만으로는 위헌 문제를 해소할 수 없음

- 독일연방기본법(헌법) 제 15조는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보상의 종류와 정도를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 또는 공동관리경제의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고 규정
- 헌법에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화 조항을 넣는 개헌 필요

■ 재벌 사회화 특별조치법 제정(특별법 제정)

1. 목적

- 대규모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생산과 분배의 결정에서 모든 경제 주체들의 평등한 참여와 이익 배분을 통한 국민경제의 기초 마련
- 공공의 경제적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생산수단)에 대한 사회화의 내용과 방법, 절차를 규정

2. 재벌사회화위원회와 재벌사회화기금의 설립

- 핵심 대기업의 사회화를 위한 심의·의결기구로 대통령 산하 재벌사회화위원회 설립
 - *재벌사회화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 위원장과 위원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위원의 구성은 노동조합 연합단체 대표 2인, 시민사회단체 대표 2인, 정부 대표 3인으로 구성하고, 재벌의 일족이나 그 영향에 있는 자는 배제
 - *위원회는 사회화 대상 기업의 유가증권을 경영권의 안정적 확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환수하고, 환수 이전에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행사를 위임받아 행사
 - *재벌사회화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재벌사회화기금의 설립
 - *재벌사회화위원회 산하에 비영리 특수법인 형태의 재벌사회화기금을 설립
 - *사회화를 위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 회계 업무의 수행

3. 재벌사회화위원회의 업무

- 기업 사회화 대상 기업의 선정
- 기업 사회화를 위한 자료 조사와 보고서 작성, 관계 법령의 개정안 마련
- 사회화 대상 기업을 사회화할 수 있는 수준의 지분(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인수하고 관리하는 역할
- 사회화 기업의 국유화, 공기업화, 협동조합 기업화 등 결정
- 재벌사회화기금의 운영에 관한 업무
-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 권한의 보유

4. 사회화 대상 기업의 재벌사회화위원회로의 지분 이양

- 사회화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지배주주는 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정지되고 재벌사회화위원회로 일체의 유가증권을 이양할 의무
- 사회화 대상 지정기업은 유가증권 등의 지분을 재벌사회화위원회로 이관하고, 재벌사회화위원회는 수령증서 발급
- 재벌사회화위원회로 이관된 지배주주의 지분에 대한 가치평가는 시가평가 방식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과거 국가적 지원, 범법 등 비위행위 등을 참작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정보상하고, 이 금액의 지불에 의해 지배주주의 해당 기업에 대한 지분 관계는 완전히 소멸

-재벌사회화위원회는 획득한 지분을 주식의 형태로 해당 기업에 대한 지분 형태로 보유하며, 이는 재벌사회화기금의 회계에 반영

■ KT·포스코·대우조선해양·한진해운 공기업화

-민영화된 KT, 포스코는 개헌 없이도 정부의 지분 인수를 통해 공기업화 가능

-한미FTA 개방화 역진 불가 조항(랏치 조항)이 걸림돌 : 한미FTA 독소조항 재협상을 통해 랏치 조항 삭제하거나 한미FTA 폐기해야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과 법정관리 수순인 대우조선해양은 정부의 지분 투자 방식으로 공기업화 가능

■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을 통한 사회화 재원의 마련

-정부가 재벌사회화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인수

-정부는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 자금을 재벌 사회화 재원으로 사용

■ 관계 법령의 정비

-한미FTA 등 통상협정의 개정 또는 폐지

*개방화 역진 불가 조항(랏치 조항)에 의해 이미 미국 자본이 투자한 기업의 국유화 내지 공기업화는 한미FTA 등 통상협정 위반이며, 손해에 대한 ISDS(투자자국가제소) 가능

*통상협정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랏치 조항, ISDS 조항 삭제를 위한 재협상 또는 협정의 폐기 필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노동당 2016 총선정책 ‘민영화와 규제완화’ 참조)

*수익성 위주 공공기관 평가방식을 공공성 중심으로 전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노동자·시민 대표성 보장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